

201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대한민국

요약 (Executive Summary)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다. 12월,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 방안을 제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대체 복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여전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금, 기소, 수감을 중단했지만, 검찰은 기존에 재판을 받은 일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재판이 시작된 935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특히 종교와 성 정체성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막았다. 난민 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 온 NGO와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담당자들이 예멘의 무슬림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자격을 충족할 수 없도록 이들의 진술을 조작했다. 한국법률투법학회(파룬궁)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서 정부와 연계된 공연장들이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파룬궁 공연단의 공연을 중단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13건의 종교 차별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는데 2018년에는 21건이었다. 언론에 따르면, 1월 시민 사회 및 종교 단체 3만 여명이 서울에 모여, 부패 및 강제 개종을 이유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7월, NGO와 학술 기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강제 개종의 철폐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슬람 교도들, 특히 2018년 난민 신청자로 입국한 예멘인들은 고용 등에서 차별 사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일부 문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폄하하기 위해 이슬람과 연관된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예멘 무슬림 난민들의 처우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그리고 정부 연계 공연장의 파룬궁 공연 대관 거부 등을 포함하여 종교적 자유에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했다. 주한미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은 성공회, 침례교, 불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유대교 관계자들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 반 이슬람 정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활용, 대사가 다양한 종교 단체와 만나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종교적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체 인구를 5,160 만 명 (2019 년 중반 기준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 2016 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4 퍼센트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45 퍼센트는 개신교, 35 퍼센트는 불교, 18 퍼센트는 가톨릭, 2 퍼센트는 ‘기타’ 종교였다. 이 인구조사에서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는 개신교로 분류됐다. 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인구는 모두 합해 2% 미만이였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랍비에 따르면, 거의 전원이 주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약 1 천 명의 유대인이 한국에 소수 거주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135,000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0 만 명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주한 외국인이다. 한국의 무슬림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이 숫자는 20 만 명이 넘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적법한 서류 등록 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 토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본 재산이 3 억 원 (\$260,000) 이상인 종교 단체는 조직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직원 명단을 제출할 경우 종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재산 매매 계약서를 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은 연간 소득에 따라 과세된다. 종교인의 교육비, 식비, 교통비, 보육비는 과세가 면제된다. 종교를 믿는 일반 개인은 종교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18-40 세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와 예비군 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은 육군 21 개월, 해군 23 개월, 공군 24 개월이다.) 12 월, 국회는 병역법을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 개월 동안 공익 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 의무와 예비군 훈련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 복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은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대체 복무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현역 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대체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8 년 동안 계속되며 1 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12 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미 현역 복무를 마쳤으나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된 경우에, 예비군 복무를 교정 시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예비군 의무 훈련 불참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졌었다. 예비군 복무 혹은 대체 복무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만원(\$170) 선이다. 고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87-\$260)씩 증가한다. 법률은 고발 건당 최고 벌금 액수를 200 만원(\$1,700) 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1 일에서 3 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와 종교 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종교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종교적 장소를 포함한 역사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의 일곱 회원 단체인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대한불교 조계종,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 민족종교 협의회 같은 주요 종교 단체들과 범종교 연대에 관해 협력하며, 종교계와의 소통에서 정부 내 주무 기관의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며, 담당 관료들을 교육하고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허가하는 임무를 지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은 만들 수 있으나, 정책을 이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12 월, 국회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 개월 동안 공익 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 의무와 예비군 훈련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병역 의무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됐던 1 천 879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대체 복무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2018년 12월과 다음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대체 복무를 원하는 현역 군인들과 예비군들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미흡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통과 이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금, 기소, 수감을 즉각 중단했지만, 당해연도 검찰은 일부 무죄 방면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등 그 믿음에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워치타워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당국은 2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이던 마지막 수감자를 석방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판결 이전에 이미 재판이 시작된 935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19년 연말 기준 여전히 재판 중이었으며, 이중 63명은 현역 복무를 마쳤으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였다.

7월에 수원지방법원은 신도 400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피지 섬 내 교회 소유지에서 폭행, 아동 학대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은혜로교회 담임목사와 교회 관계자 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은혜로교회의 전 신도들은 “사악한 영혼을 몰아낸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이 서로 구타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마음대로 집단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신 전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공보관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다른 관계자 5명은 집행 유예부터 44개월 징역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에 정부 지원 사회복지센터 한 곳에서, 사회복지사가 센터장과 성경 공부를 거부한 후 해고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한 사회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발원문을 억지로 읽어야 했고 매년 삼천 배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조계종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며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지만 학생이 안식일을 피해 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따르면 한지만 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 1 학년에 들어가서 몇몇 시험이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교회에 따르면 한지만 학생은 담당 교수들 및 학교 측과 얘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0 월,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면서 한국 최고위 카톨릭 인사인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를 포함한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종교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단체, 집권 여당 민주당 소속 의원 다수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상을 지지했지만,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가 성소수자(LGBTI) 보호를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인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은 이를 반대했다. 한기총은 그와 같은 법은 한국을 무슬림을 위한 “낙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적지향을 바탕으로한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회원 기관간 분열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운동했다.

11 월에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적지향을 바탕으로한 차별을 조사할 수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삭제하고 성별을 “생리적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안 의원은 기존법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고” 종교 혹은 기타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차별한다고 했다. 의원 300 명 중 40 명이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바른미래당, 민주당 의원 포함) 국내외 인권단체의 비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2018 년에 도착한 예멘 무슬림 난민 약 500 명 가운데, 412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1 년 연장했다. 나머지 예멘인의 체류연장에 대해서는 2019 년 말 한국 출입국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7 월에 망명신청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은 출입국 관리들이 2018 년 하반기에 망명을 신청한 예멘 무슬림의 진술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찾아 한국에 왔다고 신청자가 진술했다는 등 출입국 관리들은 난민신청의 기각을 용이하게 만드는 진술을 예멘인들이 했다고 그들에게 원인을 돌렸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사례로 출입국 관계자들이 아랍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이를 전혀 못하는 통역사를 사용했다고 한다. 7 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랍어 난민 인터뷰 기록을 조작한 난민 심사관 3 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고용주들에게 무슬림 근로자들의 기도시간과 식단을 잘 맞춰줄 것을 독려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파룬다파협회는 파룬궁 소속 선원 예술단이 예술의 전당, 서울시 유관기관 세종문화회관 등 1 월, 2 월, 7 월 서울에서 상업 공연을 위한 공연장 예약에 실패했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연장들은 일정 및 공연예술상의 이유로 선원 예술단의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밝혔으나, 예술단 관계자들은 공연장 및 유관 정부기관들이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믿는다고 진술했다. 협회는 또한 선원 예술단이 과거에 수차례 부산시 유관기관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열었지만, 이번 3 월 공연 신청도 비슷한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했다. 정부안팎의 현지 정보원들은 파룬궁과 같이 특히 민감한 “내부” 사안에 대한 한국의 조심스러운 접근방식을 지적했고, 2017 년 미국 고고도지역방어(사드) 시스템 배치를 허용한 한국정부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경험과 이로 인한 지금까지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한국정부의 신중함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8 월, 연합뉴스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카톨릭교로의 개종에 진정성이 없고 따라서 법에 따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란 남성의 난민신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2010 년 당시 6 세 아들 김민혁 군과 한국에 도착한 이 남성은 5 년 후 가톨릭교로 개종했다. 김군은 2018 년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는 8 월에 미성년 아들과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허가를 1 년 연장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년 21 건 대비, 2019 년에는 종교적 차별과 관련된 13 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1 월 27 일,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3 만명이 서울에 모여 한기총의 “위헌적 행동”에 대해 시위했으며 한기총 해체를 요구했다.

세계시민인권연대(한세연)가 시위를 조직했다. 시위자들은 세계복음연맹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기총이 부패했고, 강제 개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비난했다. 한세연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강제 개종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7 월에 종교다원주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민단체와 학술기관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제 개종을 금지시키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 특히 부모가, 개종을 원치 않는 이를 기존 교회의 목사같은 “특별 상담사” 혹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 전문가”에게 데려간다. 서한에 따르면 디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이교(異敎)라고 생각하는 종교에서 부모의 종교로 자녀를 강제 개종하려고 시도했다.

내륙으로 이주하지 않고 제주도에 남은 예멘 무슬림은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더욱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했다(2018 년에 제주도에 도착한 500 명 중 약 120 명이 남음). 하지만 내륙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계속되는 차별 경험과 무슬림을 테러와 연관시키는 전반적인 사회 시각을 보고했다. 고용주가 식단제한, 기도시간 혹은 기타 종교관행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찰, 공무원, 난민 신청자들은 무슬림 난민들을 폭력적이거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반페미니스트로 묘사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깔린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예를 들어, 6 월에 한 온라인 매체는 예멘 난민들이 한 아파트 단지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예멘 난민 탓일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난민을 가리키는) 후티 반군이 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익명의 출처를 인용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하여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부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문”과 “이슬람”을 합성한 “문슬람”이라고 비하해서 불렀다. 또한 일부는 문 지지자들을 “달”과 “탈레반”의 합성어 “달레반”으로 일컬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이같은 비하용법이 한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올리고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무슬림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불러일으킨다고 진술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 상호 이해,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패널로 모였다. 이 패널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당해 연도 내내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종교의 자유, 화해, 종교간 공존을 증진하기 위해 세미나, 전시회, 예술문화 공연, 종교간 교류 등 여러 종교행사에 다수의 종교지도자들을 초대했다. 예를 들어,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0 월 대구에서 종교인화합마당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7 개 종단의 종교인들이 초대되어 스포츠와 불교사찰 방문을 통해 공존을 탐색했다.

이슬람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소속 7 대 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속해 있다. 무슬림은 옵서버로 자주 초대된다. 9 월 25-27 일에 걸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국가인권위는 한국의 반이슬람 정서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80 명 참석자 가운데 한국이슬교중앙연합회 대표 10 명도 있었다.

8 월에는 북한의 국가통제 기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와 한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 연례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발표했다.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중략)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3 월에는 서울에서 한국의 유일한 랍비가 한국 최초의 유대교 목욕시설인 “미크바”를 열었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및 관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의원 등 정부 당국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적 이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평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는 입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관용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한국정부와 예멘 무슬림의 대우에 관해 논의했다. 중국의 압박을 받아 정부지원 공연장들이 선원 예술단에 공연장 대여를 거절했고 이로써 한국정부가 파룬궁에 대한 검열에 기여하고 있다는 한국파룬다파협회의 주장에 관해서도 미국대사는 외교차관급 관계자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대사는 또한 성공회, 침례교, 불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 반이슬람 정서, 서울에서 유대교 회당 개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사안들을 논의했고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과 한국 최대 모스크 이맘 등 다양한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나 종교적 관용의 현황과 반이슬람 정서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다. 또한 대사관 관계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과 재판을 기다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대사 - 미군·한국군 군목들과 만남, 5 월 대사관 - 조계종 관계들과의 만남 소식을 알렸다. 종교 다양성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 3 월 대사가 한국 유일의 랍비와 만나고 한국 최초의 미크베 오픈 기념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달했다. 또한 9 월 23 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수호를 촉구한 미국 부통령의 연설문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